

는 200억원 지방비를시작으로 사업비가본격투입될예정이다.

이와함께연계사업으로△삼교호: 합상전시관 및 피싱파크, 오션시어터 조성(254억원) △만리포해수욕장: 해안위락형관광지 조성(64억원) △남당지구: 씨푸드 물, 수산물직판장, 가족호텔등중저가호텔도입(53억원) △춘장대해수욕장: 횃집단지, 향토음식점, 야영장비치(33억원) 등도반영되어있다.

아울러해양관광자원개발·관리및농어촌 체험 관광 자원 개발, 생태 체험 관광 자원 개발·관리, 특성있는문화관광 자원 개발 축제등의전략사업도추진을앞두고있다. 또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비 92억원과 농림부 사업비 47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국도 77호선(해안도로) 정비(1조 6,629억원) 등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을위한기반 시설투자비는총1조 7,536억원에달한다.

서해안관광벨트는지금 좌초 위기

이번사고로작년 10월세계적수준의친환경 관광·레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착공한태안기업도시건설사업은갈길이걱정이다. 현대건설은오는 202년까지 총사업비 9조 156억원을투자해국내최대규모인골프장(1,464㎡)을 포함해 국제비즈니스단지, 테마파크, 인공수로, 생태공원등세울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당초 추정했던 관광객들이발길을돌릴까우려하지않을수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아직 피해상황이계량화되지 않아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나 향후관광객추이가 당초예상을밑돌면사업추진속도와범위조절이불가피하다. 충남도역시태안기업도시가안면도곶지및지포지구관광지, 보령 안면도연륙교, 보령 지역 도서 등을 연계하는 서해안관광벨트의시점이어서좌불안석이다.

충남도가야심차게 추진 중인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을 비롯한대부분의관광개발 사업은 재원의 90%가 민자에 의존하고있는데, 천혜의자연자원훼손으로인한이미지추락으로향후투자유치가쉽지 않을전망이다.

특히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476억원(공공 95억원, 민자 9,511억원)을투입해국제수준의첨단휴양지로 탈바꿈하고 서해안 관광의 중심 거점화를 도모하는안면도관광지개발은기름오염권중심에 자리해 관광객 모시기에 난항이 예고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장 해양 수산 자원에문제가발생하지만중장기적으로는서해안의해양관광 자원을이용한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서해안 관광개발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 외국인등민간자본을유치하는것으로대외이미지가떨어져홍보와자본유치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고밝혔다.

실태 조사 거쳐 후속 조치

정부는 사고 직후 ‘태안 지역 관광산업 복구 지원 T/F’를 구성, 피해 실태 조사에나섰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산업피해1차실태조사에착수, 이달까지관광자원 및 관광 업체 피해 조사 등을 통해 지역관광개발및관광활동에미치는장단기영향 분석 및 보상 사각 지대 주민 지원 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이어 피해 복구 상황을 고려하여 2차 정밀조사를오는6월까지진행할예정이라고한다. 또한문화관광부는관광이 주요 수입원인 특별 재난 지역 내 관광 사업체 및 일반숙박시설에대한특별지원을위한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있다.

또, 태안지역과주변지역을연계한관광상품을개발하고피해지역관광자원 개발

을 위해 태안 생태 녹색 체험장 복원 사업, 보령오토캠핑장조성사업등에국고추가지원을검토하기로했다.

이 밖에 태안 기업도시의 주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기 지원하고 기업도시 조성 과정에태안지역주민을의무 고용하는한편 지역 건설업체 우선 도급 등 상생 협력 지원방안도전개할예정이다.

충남도 역시 각종 개발 사업을 수정·보완하고해수욕장 등관광지피해대책마련을위해가칭 ‘지역경제대책반’을운영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특히오는2009년4월개최예정인안면도꽃박람회는더욱적극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방침이다.

해양 생태계·이미지 회복 시급

서해안관광개발사업의성패는향후생태계복원및이미지회복여부와속도에달렸다. 거리와볼거리, 즐길거리등관광산업기반이 없는 황무지에서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추진하더라도미래관광객들이이곳을찾을지는미지수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도입해 해양 생태계를 시급히 복원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민자유치에절대적으로 의존하는관광개발사업에대한 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현행규제완화와기반시설확대지원도검토할만하다.

하지만이처럼인위적이고물리적인노력보다는전국민이서해안의아름다운추억을 되새기며내키지않더라도오염인근지역을 찾는발걸음이절실하다. 우리가황폐화시킨 곳을 스스로 복원하여 찾지 않고 외국인 등

다른 이가 찾아오길 바라서는안된다. 



채희찬
일간건설기자
chc@cnews.co.kr

‘4주 이하 의 재해, PQ 신인도 반영 제외 검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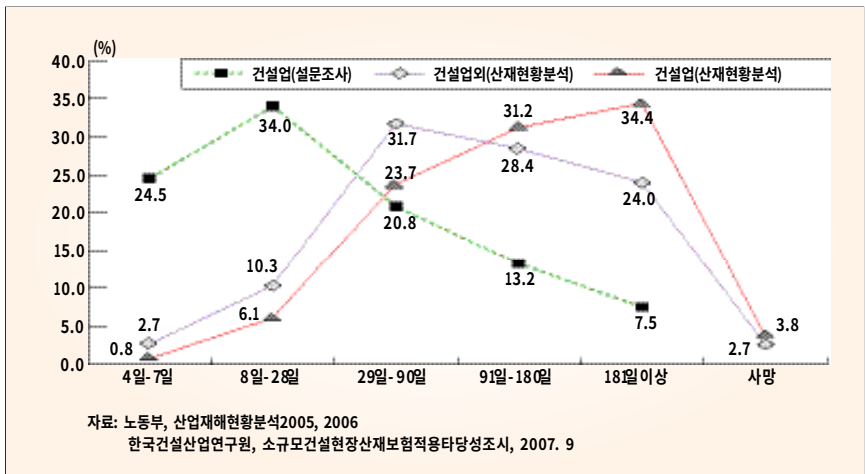
- 미신고저감으로노사원-원가능, 재해율발표대상확대로단점보완-

산재가 발생할 경우 이것은 피해자 본인의 건강또는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 재해가 발생한 직장에서는 사고당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작업능률이나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납기가 지연되며, 그 결과 연체료를 지불하거나 사회적인 용도가 저하되어 향후의 수주가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산재발생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지 악화, 노사관계 악화, 숙련 기반의 약화, 신규 인력의 진입 기피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게 된다. 2006년에는 건설업의 재해자가 1만 7,955명, 그리고 사망자가 632명 발생하였다. 그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 규모는 노동부에 따르면 약 4조원, 근로 손실 일수는 약 1,78만 일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저감 위해 PQ에 재해율 반영

정부도 건설업 산재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를 통해 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 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환산재해율을 산정 및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정도별(치료 예상 기간별) 재해자 분포 : 노동부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발표된 환산 재해율(4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1건, 사망 재해는 1건으로 환산)은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PQ의 신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적격 심사의 신인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산재에 대한 건설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안전 노력을 촉진하여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6년에는 PQ 신인도에 포함되는 재해율 배점을 2점에서 재해율 자체에 대해서는 +2점, 그리고 미신고 적발시 최고 -2점(건당 -0.2)으로 조정하였다.

산재 미신고의 원인과 폐해

실제로 PQ에 반영된 재해율이 건설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있었으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산재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절박감 역시 증가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기업의 생사가 달린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김진수 등(원·하청 업체의 산재 발생 실태 및 산재 은폐근절 방안, 노동부, 2002)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체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 ‘PQ로 인한 입찰 자격 심사시 미칠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88.7%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산재 처리 대신 비공식적으로 보상하는 공상 처리 방식

산재 은폐 재해의 요양 기간

구분	계	1주 이하	4주 이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사망 재해	요양기간 미상
건수(건)	2,654	748	1,374	424	61	25	2	20
비율(%)	100	28	52	16	2	1	0	1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2001. 3.